

북한 나진·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 정책 전망

1999. 7

오승렬 (북한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나진·선봉지대 개발 개황	3
1. 지대설립 및 법규 정비	3
2. 개발계획의 조정	3
3. 외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보완조치	6
4. 지대 통제의 강화	7
III.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외자유치 실적	9
1. 법·제도적 환경	9
2. 사회간접자본	11
3. 생산요소 및 상품 시장	13
4. 정치적 환경 및 국가신뢰도	14
5.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실적	15
6. 종합평가	17

IV. 북한 경제정책 동향과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변화	19
1. 북한 경제정책 동향 및 평가	19
2.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변화	22
V. 북한의 ‘지대’정책 변화 전망 및 고려사항	25
1. ‘지대’정책 변화 전망	25
2. 고려사항	27
<부록> 나진·선봉지대 외국기업 진출현황	28

I. 문제제기

- 북한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합영법(1984)을 통한 외자유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1991.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개발을 추진해 왔음.
- 동 지대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북한은 법령제정 및 보완,¹⁾ 지대 면적 확대, 투자유치희망사업 목록 및 지대국토건설총계획의 발표, 투자설명회 개최,²⁾ 정무원직할시 지정 및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지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1997. 6월 북한은 동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정리 자유시장 개장, 지대 내에서의 자영업 허용, 환율의 현실화와 변동환율제의 실시 등 전향적 정책을 취한 바 있음.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지대의 외자유치 실적은 1997년 말 기준으로 6,242만 달러(77건)수준에 불과했으며,³⁾ 이는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기존정책과 관련, 김정일을 위시한 북

* 본 보고서를 위해 기꺼이 토론에 참여하여 견해를 제시해주신 김영윤·최수영·임강택·김성철·제성호·김병로 박사와 통일부 홍성국과장께 감사드린다.

- 1) '98년 말 현재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총 58개이며, 이 중 나진·선봉 지대에만 관련된 법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기본으로 하여 총 20여개임.
- 2) '93년 이후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설명회를 독일, 홍콩 등 10여 개국에서 30여 회 열고, '96. 9월과 '98. 9월에는 나진·선봉 현지에서 투자포럼을 개최하였음.
- 3) 리경일(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98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투자상담회 북한측 기초연설문(나진, '98. 9. 24~9. 26)

한 지도부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당국은 1998. 9월 이후 헌법개정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나진·선봉지대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대한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동 지대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했으며, 서방기업들의 광고판을 철거하고 남한기업의 방문을 불허하고 있음.⁴⁾

○본 보고서에서는 나진·선봉지대 현황 및 투자환경을 평가하고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이후 동 지대의 기능 및 역할이 변화했음을 보인 다음, 향후 북한의 '지대'정책 변화 전망 및 우리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4) 통일부에 의하면 '98. 9. 23~9. 26 한민족복지재단 관계자들의 나진·선봉 방문 이래 남한 기업인의 지대 방문실적이 없음.

II. 나진·선봉지대 개발 개황

1. 지대설립 및 법규 정비

○1991. 12월 북한은 정무원 결정 제74호에 의해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 621km² ('93.9.24 중앙인민위원회정령으로 은덕군 원정리 등 3개리(里) 125km²를 추가하여 746km²로 확대: 개발대상토지는 230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인구 100만의 동북아시아의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관광·금융·서비스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나진·선봉지대는 총 27개의 동·리(라진구역 14, 선봉군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대'거주 인구는 1996년 현재 약 14만명
- 외국투자유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92.10.5)과 지대창설 및 운영 기본법인 자유경제무역지대법('93.1.31)을 중심으로 1998년 말까지 총 58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했으며, 이중 20여 개의 법규는 나진·선봉지대에만 적용

2. 개발계획의 조정

○북한은 1993. 3월 「나진·선봉지대 국토총건설계획」을 통해 3단계(제1단계: 1993~1995, 제2단계: 1996~2000, 제3단계: 2001~2010) 개발전략을 세웠으며, 1993. 11월 단계별 나진·선봉 개발계획과 투

자대상 및 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방식을 밝힌 책자를 외국투자자에게 배포하였음.⁵⁾

- 제1단계: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공단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를 동시에 추진
- 제2단계: 국제화물중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수출주도형 제조업 투자 유치
- 제3단계: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등 제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화
- 인프라 정비와 9개 공단 건설을 위한 총 69억 8,900만 달러의 프로젝트별 외자유치계획: 인프라 정비: 33억 2,645만 달러, 공업 프로젝트: 36억 6,255만 달러
- 68건의 공업프로젝트중 36건이 중공업분야이며 건(件)당 예상평균투자규모가 과대: 석유·화학부문은 약 5억 달러, 전기·전자부문은 약 5천만달러, 섬유·의복부문은 약 1,000만 달러, 목재·가구부문은 약 2,000만 달러⁶⁾

○ 초기 「라진·선봉지대국토건설총계획」의 비현실성과 미미했던 제1단계 기간 동안의 외자유치실적으로 인해 1995년초 지대개발계획을 당면단계(1992~2000)와 전망단계(2001~2010)의 2단계 계획으

5)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1993),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

6) 희망투자유치규모 합계 및 평균수치는 배종렬, “집경 3국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주요내용”, 김익수 편,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에 대한 평가」(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93~135에서 인용.

로 조정하고,⁷⁾ 당면단계에서는 국제화물중계기지 및 수출가공기지 건설, 전망단계에서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국제교류 거점도시 건설에 중점을 둠.

○북한은 비현실적으로 건당 규모가 과대했던 초기의 나진·선봉지대 투자유치희망프로젝트를 점차 현실적인 것으로 축소 조정하였음.

- 1996. 9월 나진·선봉 투자포럼에서 발표된 투자유치 희망프로젝트 99건 8억 9,600만 달러의 건당 평균투자규모는 약 905만 달러로 초기의 투자유치희망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축소되었으며,⁸⁾ 특히 투자유치 우선대상 33건 중 25개 부문은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이었음.⁹⁾
- 1997년 초 북한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출한 투자유치 희망목록에 따르면, 나진·선봉지대 투자유치희망프로젝트 25건의 건당 평균투자규모는 약 200만 달러 수준이며, 가장 큰 사업인 웅상리의 미조립건자재 프로젝트 역시 660만 달러에 불과했고 대상사업 역시 대부분 경공업부문에 집중되었음.¹⁰⁾

7) 김일성대학종합출판사(1995),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8) 림태덕, 「라진·선봉지대 개발현황과 개발계획」, 나진선봉투자포럼 배포자료, 1996. 9.

9) 공업투자대상이 총 101건, 63억 9,690만 달러이나, 이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에 따라 2건 5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석유정제·화학플랜트를 포함시켰기 때문임.

10) 일본 環日本海經濟研究所, *ERINA REPORT*, Vol.20, 1997.12, 오강수, “북한 나진·선봉의 외자유치현황과 개발동향”,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동향 1997」, 1998.4, p. 63로부터 계산.

3. 외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보완조치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의 외자유치실적이 저조하자, 1995년부터는 나진·선봉지역의 법·제도적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시행규정을 집중적으로 제정하고, 투자지원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기관을 설립하였음.

- 세관규정('95.6), 건물양도 및 저장규정('95.8), 광고규정('96.4) 등 총 20여 개의 시행규정을 1~2년 동안의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제정
- 유엔개발계획(UNDP) 및 UNIDO의 지원하에 「라진기업학교」와 「라진기업정보센터」 설립('98.9)

○아울러 북한은 외자의존형이던 인프라 정비계획에 내부자원을 동원하고, 지대관련 운송체계 등을 보완함으로써 투자환경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나진-학송-암양-회령 연결 철도전기화(1995), 원정-나진간 간선도로 확장 및 포장, 원정-선봉간 두만강계곡 경유도로 신설공사 등에 약 2억원(북한원)의 내부재원 투입¹¹⁾
- 나진-부산간 컨테이너항로 및 원정과 중국 권하간의 국경통로 개설(1995), 연간 6,000개의 컨테이너 운송능력을 갖춘 나진-남

11) 일본 環日本海經濟研究所, ERINA REPORT('97. 12),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等を巡る最近の動きについて" 요약, <http://www.kotra.or.kr/nk/economy/c/a.htm>.

양 직통화물열차 운행개시(1997), 청진항 3·4 부두 완공(1997), 나진항 세관건설, 나진1호 국제호텔 완공(1996), 나진-선봉연결 철도관리체계의 일원화(1997),¹²⁾ 나진-도문간 관광열차 운행개시(1997), 비파관광숙소 완공(1997), 나진항 크레인 처리능력 10톤에서 30톤으로 확장(1997) 및 갠트리 크레인(문형기중기) 설치(1998), 나진-훈춘 광케이블선 개통 및 무선국제전화체계 구축(1998), 현재 나진-연길, 나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헬리콥터 항공 운송체계를 구축중.¹³⁾

○이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 및 지대 경제기반 확충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북한은 1997. 6월 나진·선봉지대에서 ① ‘외화와바꾼돈표’ 유통폐지와 환율현실화('99.6 현재 미화 1\$=북한 원 220) 및 변동환율제 실시, ②원정리에 ‘조·중 공동시장’ 개설, ③개인자영업 허용, ④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당국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지원 중단)를 실시함으로써 나진·선봉지대에 보다 ‘자유로운’ 경제제도를 도입하였음.

12) 제한된 기관차와 철도차량을 놓고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던 4~5개의 철도분국을 라진철도국 하나로 통합하여 두만강으로부터 남양 또는 중국 도문까지의 철도운송과 청진까지의 철로를 책임지게 하였음. 홍성국, “나진·선봉지대 경제개혁관련 조치와 최근 동향”(1999. 6), 통일부 정보분석실 경제담당관실 자료

13) 김수용(김일성대 교수), “라진·선봉은 동북아시아 수송망체계에서 관문, 교두로개발되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98 니이가타(日) 동북아 경제회의 발표문. (1998. 2)

4. 지대 통제의 강화

○1998. 9월 헌법개정 및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외형상 기존의 전향적 정책과는 상충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자유’를 빼고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호칭
- 헌법 개정에 따라 ‘지대’내의 토지 임대권과 기업창설 심의·승인권, 대표단 초청권 등을 행사해 오던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관련업무를 「나진·선봉인민위원회」가 직접 관할¹⁴⁾
- 대외경제위원회의 무역성 편입에 따른 상대적 위상 약화와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기관으로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활동 축소(과거 지역담당제 조직을 분야별 전문제로 개편)¹⁵⁾
- ‘지대’내 대형 서방기업 광고판 철거, 정치구호로 대체
- ‘지대’내 농촌지역 주민들의 도시지역(나진, 선봉, 웅상, 원정리) 출입 통제
- 원정리 ‘조·중공동시장’ 출입통제 강화
- 남한기업의 지대방문 중단

14) 나진·선봉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김수열, 부위원장은 엄홍남이며, 최근 군부의 소장장교들이 인민위원회의 행정에 관여함으로써 동 지대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군의 개입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홍성국, 앞의 자료.

15) 과거 김정우가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대경추) 위원장으로서 지대의 대외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동안 대경추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독자적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나, 현 무역성 부상인 립태덕이 대경추 위원장 대리의 직책을 맡은 이후 대경추의 실질적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됨.

Ⅲ.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외자유치 실적

1. 법·제도적 환경

○ 생산 및 유통, 생산요소의 조달, 수출입과정 등을 포함한 ‘지대’ 관리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북한 내부 경제와 ‘지대 경제’와의 시장경제적 연계성이 차단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지대’기업이 북한 내부로부터 물자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계획에 미리 반영되어야 하므로 시장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합영법시행규정 제75조).

○ ‘지대’에는 외국인 단독투자가 가능하지만 규정상 이들에 대한 선별적 관리가 가능하며, 북한측이 참여하는 합영·합작회사가 기업경영의 제반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음.¹⁶⁾

○ 외국인투자의 경우 동일한 세목(稅目)의 세율에 있어서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¹⁷⁾ 적용되는 세목이 다양하

16) 예를 들면,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94.3)은 외국인기업 투자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을 4개나 포함하고 있음.

17) 나진·선봉지대의 기업소득세율은 14%로 중국의 15%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에 있어서도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할 경우, 중국은 이윤발생연도부터 2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면제인데 비해 북한은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범위에서 감면해주고 있음. 해외 송금에 따른 세금도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0%, 5% 수준인데 비해 북한은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고 그 정의가 불명확하여 실질적 세금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함.

○ 개발초기에 실질적 투자가능성이 높은 남한 또는 해외의 동포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결여되어 있음.¹⁸⁾

○ 합작·합영기업 관련 분쟁은 북한의 중재기관·재판기관을 통해 해결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제3국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기업 관련 분쟁은 반드시 북한의 중재기관·재판기관에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자본의 독자적 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법’ 제66조는 북한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외국인기업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

○ 지대출입과 관련, 무사증(査證) 입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출입자들의 사전 명단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북한이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대’출입자를 선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¹⁹⁾

18) 중국은 해외화교 및 대만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대만동포투자촉진을 위한 국무원 규정’, ‘화교투자 우대를 위한 국무원 규정’,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대한 특별우대 방안에 대한 국무원 규정’ 등 법률적 장치를 통한 특별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19)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5조, 20조.

○ 관련 법규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²⁰⁾ 북한측이 토지·건물 등을 출자할 경우, 과대 평가될 수 있으며 지적 재산권 투자시의 평가 방법이 모호함.

2. 사회간접자본

○ 북한은 지대 개발 초기에 외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단독 투자는 불허, 북한측과의 합영·합작만 가능하도록 규제)을 계획했으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자 약 2억원(북한원) 수준의 내부재원을 투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나진·선봉지대의 경제적 기능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지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대당국의 역할을 명문화한 규정 부재²¹⁾

○ 전력: 지대의 전력은 부족하지 않으나(3개 화력발전소의 총발전용량은 77만kw), 비효율적 송배전설비와 낮은 전압(180볼트)으로 공장의 정상적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0) 예를 들면, '공화국에 해로운 산업'(「외국인투자법」 11조, 「합영법시행규정」 11조)은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21) 중국의 경우 '광둥성경제특구조례'에서 광둥성경제특구관리위원회가 특구의 공업용지 조성, 전기 및 수자원 공급, 도로·통신·항만·창고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통신: 태국 Loxley사의 투자에 의해 지대내의 통신시설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해외통화의 통제²²⁾와 높은 통신비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으며, 전화의 경우 아직 지대 내에서조차도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수송: 지대내 철로의 전철화, 북한-중국간의 도로 개설 및 포장 계획이 일부 완료되었으나, 아직 거리에 비해 많은 수송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관련 설비 부족으로 인해 수송효율이 낮은 편이고, 항만 하역능력 역시 본격적인 중계무역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²³⁾

- 중국 훈춘지역과의 수송체계와 관련, 나진과 경쟁관계에 있는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비교할 경우 나진은 컨테이너와 벌크 등 다양한 화물의 취급이 가능하고 항만시설이 정비되고 있으며, 중국 또는 러시아행 화물 모두 환적(換積)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육로의 도로포장상태가 매우 나쁘고 도로가 협소하며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음.²⁴⁾

22) 국제통화가 가능한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호텔에서는 전화교환수를 경유하여 통화 가능.

23) '98년 말 현재 나진항에 30톤 급 크레인 2대, 10톤 급 크레인 5개, 30톤급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음.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수송업 현황”, <http://www.kotra.or.kr/nk/letter/g.htm>

3. 생산요소 및 상품 시장

○ 임금 및 노동력: 지대 최저임금은 160원(북한원)으로 공식환율 적용시 미화 75달러에 해당하나, 1997. 6월부터 지대에서의 환율이 현실화됨에 따라 어느 정도 임금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외화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 비용은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노동력의 교육수준은 높으나, 시장경제 운용 논리에 대한 적응 능력 부족
- 직접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중국·베트남과는 달리 직업알선기관을 통해야 하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 노동력의 질과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국 및 러시아 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비용: 토지관리당국은 입찰 및 경매를 통해 토지이용권의 임대료를 받는 외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징수하며, 임대료에 토지정리·상하수도·전기·통신·난방시설 등에 지출된 토지개발비를 포함하므로 토지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²⁵⁾

- 나진·선봉지대 1급지의 토지임대료는 1m²당 20.98(美)달러(50년 기한)

○ 내수시장 접근: 나진·선봉지대의 외국투자기업이 북한 타 지역에

²⁵⁾ 「토지임대법」(1993. 10) 제29조

서 원료·자재·설비를 사거나 생산품을 지대 이외의 지역에 판매할 경우, 북한의 무역기관을 통하거나 북한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대' 이외의 북한 지역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국정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 내수시장과 지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음.²⁶⁾

4. 정치적 환경 및 국가신뢰도

○나진·선봉지대의 지정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혁,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 및 중국 경제개혁의 가속화²⁷⁾와 맞물려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도 '지대' 개발을 위해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도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핵문제 및 북한의 군사도발 등에 의한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지대'의 투자환경은 불안정하였음.

- 북·미 핵협상 타결(1994.10)에 따른 남한의 남북경제협력활성화 조치(1994.11) 및 미국의 부분적 대북경제제재완화(1995.1)는 1995초 미국기업대표단 및 기타 서방기업대표단의 지대시찰로

26) 「외국인기업법」 제17조. 단 합영기업의 경우 직접 수출이 가능하며, 생산제품을 다른 합영 및 합작회사나 무역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음.

27) 천안문사태 이후 침체상태에 놓여있던 중국의 경제개혁은 1992년 초 중국 鄧小平이 심천을 포함한 중국남부지역을 순시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南巡講話' 이후 다시금 가속화되었음.

- 이어졌으나,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탈퇴(1993.3)와 핵개발의
 혹은 북한의 국가신뢰도 제고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였음.²⁸⁾
- 북한의 남한당국 배제전략과 간헐적으로 지속된 잠수정침투사건
 및 쌀수송선 억류·인공기계양사건, 최근의 서해교전 및 금강산
 관광객 억류 등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갈등 역시 북한의 경제
 개발 의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

5.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실적

- 나진·선봉지대의 실제 투자유치 규모는 발표기관에 따라 다소 상
 이함을 보이고 있으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에 사무국에 의
 하면 1998년말 까지 약 8,8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며, 이는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으로 평가됨.²⁹⁾
- 한편 투자 이행 총액 및 건수 에 있어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는 서방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나진·선봉지역을 동북아의 중심
 적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 건설하려던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동
 지역의 기능이 중국의 훈춘·도문·연길 경제권의 배후지역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8) 북한 핵문제 해결이 낙관시 되던 1995. 7월에도 일본의 JBRI(Japan Bond Research Institute)는 북한의 국가위협도 순위를 98개 대상국중 96위로 평
 가한 바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지대의 투자환경 평가”,
<http://www.kotra.or.kr/nk/economy/c/f.htm>

29) 나진·선봉지대 외국기업 진출현황은 <부록> 참조.

<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실적: 북한발표 자료 >

(단위: 만US\$)

구 분	'95년까지	'96년	'97년말까지의 합계
중 국	290.48	61.51	총 6,242 111건 7억5,077만 달러 계약, 실제투자실적은 77건 6,242만 달러
태 국	-	782.89	
홍 콩	41.65	2,008.85	
싱가포르	-	24.91	
뉴질랜드	-	10	
기타(교포포함)	298.85	213.45	
합 계	630.85	3,101.61	

출처: '96년까지는 '97.8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발표자료, '97년은 리행호 (북한사회과학원 세계경제남남협력연구소장),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특징”(일본 環日本海經濟研究所, ERINA REPORT, 1998. 8).

<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실적: 조일수출입상사 자료(1997년 현재) >

(단위: 만US\$)

구 분	중 국	일 본	홍 콩	영 국	네덜란드	기 타	합 계
계 약 (건)	28,160 (68)	7,822 (21)	31,584 (11)	2,000 (3)	1,536 (2)	3,713 (6)	75,085 (111)
이 행 (건)	1,328 (43)	539 (16)	1,844 (8)	34 (3)	786 (2)	1,261 (5)	5,792 (77)

출처: 1989. 9 조총련계 기업 「조일수출입상사」 작성.

<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실적: TRADP사무국 자료 >

(단위: 백만US\$)

1995	1996	1997	1998	누계
4	31	26	25	88

출처: 고일동,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현황과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1999.6), p. 9.

6. 종합평가

- 나진·선봉지대는 임금·노동력·토지비용·조세제도 등 실물적 투자 환경에 있어서는 중국과 베트남 등 개혁과정에 있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대체적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계획은 내부경제와 분리된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수지대’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곧 관련 법규 및 정책의 한계성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자유입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프라 미비를 들고 있으나,
 - 최근 북한이 중계무역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 내부자원을 동원할 정도로 적극적이며, 관광관련 서비스업 등 경제성이 예견되는 부문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지대’의 인프라 용량이 현재 동 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에 비해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 미비는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체제유지 및 경제실리 획득과 외교적 목적을 위한 ‘벼랑끝 전략’ 역시 북한의 외교적 대외협상력 제고에는 일정부분 기여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으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투명도 제고와 남한 및 인접국가와의 경제관계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지대’의 기능과 역할, 발전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노동력과 조세제도 등 나진·선봉지대의 실물경제적 여건은 그다지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북한의 체제 및 정책적 제약요인이 외자유치실적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됨.

IV. 북한 경제정책 동향과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변화

1. 북한 경제정책 동향 및 평가

○ 최근 북한 경제정책 관련 동향으로는 ①1998. 9월의 북한의 헌법개정과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②새로운 체제 결집이념으로서 ‘강성대국론’의 제시(’98. 8. 22, 노동신문 정론), ③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강조(’98. 9. 17,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④「인민경제계획법」 제정 및 예·결산 보고(’99. 4), ⑤나진·선봉지대 투자유치 활동의 축소 및 중앙의 ‘지대’ 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새 헌법 경제부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국가소유보다 느슨한 공적 소유 형태인 집체소유(collective ownership) 영역을 농업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제2장 제22조)
- 개인의 상업활동범위를 기존의 ‘개인부업경리’에 더해 ‘합법적인 경리활동’으로 확대(제2장 제24조)
- 독립채산제와 원가·가격·수익성 등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경제 기제의 개선을 명문화(제2장 제33조)
- 대외무역주체에 사회협동단체를 포함함으로써 대외무역 창구의 다양화(제2장 제36조)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소유형태(외국인 100%투자기

- 업 등)를 명문화(제2장 제37조)³⁰⁾
- 거주·여행의 자유 명시(제5장 제75조)³¹⁾

○ 새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은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보완하여 경제적 생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침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비공식부문의 경제행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며, 계획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새 헌법이 '시장기구의 도입' 등 본질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집체소유 역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공적(公的) 소유의 한 형태
- 개인의 소유는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국한
- 독립채산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의 개념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 속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방식으로서 이미 1986년 '주체의 경제리론'으로 제시(시장 공급과 수요의 법칙 활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회계 및 계획상의 과학성을 의미)³²⁾

30) 제37조는 나진·선봉 등 특수경제지대에서만 100% 외자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북한기업과 외자기업의 합영·합작 형식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음.

31) 제75조 '거주 및 여행의 자유' 항목은 제67조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 제68조 '신앙의 자유' 항목과 마찬가지로 형식을 갖추기 위한 조항이며, 실질적으로 주민의 여행 및 거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향적 내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32)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주의하에서 물질적관심성과 가치법칙의 올바른리용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1986)

○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던 ‘유훈통치’ 및 과도적 적응기를 마감하고,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범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체제결집 이념으로서 ‘주체적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경제적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표방
- 외자(外資)의존적 경제정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건설 및 시장기구의 도입 등 근본적 개혁조치의 필요성 부정³³⁾

○ 1999. 4월 제10기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고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중단되었던 예·결산 보고를 부활시킨 것은 계획경제 부문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운용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은 ‘과거로의 회귀’라기 보다는 그 동안 계획경제부문이 마비됨에 따라 계획부문의 물자 등이 농민시장 등 비공식부문으로 유출되는 혼란상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존재
- 따라서 지방 유희자원의 동원을 통한 비계획부문의 생산 및 유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계획부문과 비계획부문의 분할 관리).

33) “...외자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사상에 공백이 없는 것처럼 경제분야에서도 공백지대(‘자유’경제무역지대)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원칙에서 한 걸음 양보하면 자본주의적 개혁바람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이다”,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1998. 9. 17, 팔호는 필자 첨가)

2.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변화

○그 동안 북한이 부여한 나진·선봉지대의 역할은 ①중·경공업 등 전산업분야를 막라한 제조업과 금융·중개(仲介)무역 기능을 갖춘 종합적 자유경제무역지대→②경공업 수출가공과 원자재(원유 및 목재)가공 및 중개(仲介)무역 기지→③단순 무역중계(中繼) 및 관광 거점으로 변화해 왔음.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함.³⁴⁾

- 1991~96년 동안 북한의 지대 투자유치희망 사업내역을 대규모 제조업·사회간접자본→수출용 경공업 및 가공산업으로 조정했으나 투자환경 미비와 북·미, 북·일 관계개선 지연으로 외자유치 실적 저조
- 1996년 이후 북한은 내부자원을 동원하여, 지대 및 나진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관광 및 중계무역용 수송체계 개선에 주력³⁵⁾
- 북한은 1996년 이후 ①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구, ②함경북도 회령·온성 등 국경도시 중심의 두만강지구, ③평안북도 신의

34) 중개(仲介)무역은 기본적으로 중개지(仲介地)에서 가공 또는 포장 및 상업유통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중계(中繼)무역은 단순히 항구나 도로 등 경유로(經由路)를 제공함으로써 사용료 등의 수입을 얻는데 그친다는 측면에서 구분하였음.

35) 1997. 8월부터 나진-중국 도문간 관광열차 운행 및 지대 내 호텔완공과 무사증 제도 정비 등에 힘입어 지대 방문 외국인수는 1996년 9,800명에서 '98년 4만 명으로 증가했음.'98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투자상담회 북한측 기조연설문.

주 중심의 압록강 유역, ④함경북도 칠보산 등을 4대 관광지구로 개발해 왔으며,³⁶⁾이중 3곳이 나진·선봉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

- 1997. 6월부터 지대 내에서 외화를 직접 사용하고, 환율을 현실화 함은 물론 「조·중 공동시장」 개설 및 개인 자영업 허용 등을 통해 ‘지대’ 방문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대폭 증가
- 1998. 9월 이후 나진·선봉지역의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관광 및 증계무역 이외의 종합적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의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제한

○최근 북한은 기존의 정책과 상반되는 양상의 ‘지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이 나진·선봉지대에 부여하고 있는 역할 및 기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뿐, 북한 정책 방향의 반전(反轉) 또는 정책상의 혼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변화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체제적 제약요인³⁷⁾으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의 한계 및 아시아

36) 황봉혁(북한 국가관광총국 총국장), 1997. 4월 중국 인민일보와의 회견. 김정일은 1996. 6월과 11월 등 두차례에 걸쳐 칠보산 지역을 방문하여 문화유원지로 개발할 것을 지시했으며, 칠보산은 금년에 중국 및 일본관광객에 개방되었음.

37) ‘싱가포르 모델’의 나진·선봉지대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북한이 유신통치 기간의 종료후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체제결속 이념(자립경제건설노선에 의한 사회주의 원칙 고수 및 ‘강성대국론’)과 상충됨.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

- 북·미, 북·일관계 개선의 지연에 따른 서방기업 의존적 개발의 어려움
- 종합적 지대개발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내부자원 부족
- ‘강성대국론’ 및 ‘자립적 경제건설노선’ 표방 이후 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관광 및 무역중계부문이 제조업 영역에 비해 체제 과급효과·외화가득율·소요투자규모 및 소요시간(자본회임기간)·판로 및 원자재 문제 회피 등의 측면에서 유리³⁸⁾

38) 최근 금강산 관광사업 시행 이후 여타 제조업부문에서의 남북경협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북한은 이미 금강산 관광사업이 실현되기 이전부터 체제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관광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을 추진해 왔으며, 금강산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됨.

V. 북한의 '지대'정책 변화 전망 및 고려사항

1. '지대'정책 변화 전망

○북한은 제조업·수출가공·금융 및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관광·무역중계(中繼)를³⁹⁾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발휘하는 '특수경제지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시장근접성 및 생산기반시설 등 제조업의 입지조건이 나진·선봉지대보다 나은 신의주·원산·남포 등지에 위탁가공과 수출을 위한 소규모의 보세가공구역 및 외국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할 것임.⁴⁰⁾

○1998. 9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관리 강화 경향은 지속될 것이며, 서방측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의 개최와 투자유치 희망사업목록 발표 등은 지양하고 지대의 '조용한 개발'을 추진할 것임.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대' 내·외부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호텔·통신·운송 등의 서비스 부문

39) 중개(仲介)와 중계(中繼) 무역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주 34) 참조.

40) 북한 무역성 부상 김룡문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99.3.15)에서 "우리는....기타 특수경제지대를 새로 창설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지금은 법적정비와 하부구조설비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음.

확충에 주력할 것이며, 소요재원은 중국 및 홍콩·대만기업의 투자로 충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진·선봉지대내에 별도의 소규모 ‘관광특구’를 설치하여, 면세(免稅)매장·카지노·골프장 및 유흥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외화획득·투자재원 절감·체제 파급효과 차단을 동시에 강구할 것임.

○ 한편 ‘지대’의 무역중계(中繼)거점화를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중국 연길·훈춘 지역, 러시아 자루비노·포시에트 지역과의 연계 수송망을 확충할 것임.

- 재원은 ‘지대’내 수송체계에 대해서는 주로 내부자원을 투입하고, 중·러와의 연계망은 UNDP 등을 통한 주변국의 지원과 중국계 기업의 투자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 이유와 체제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당분간 남한기업의 직접적인 ‘지대’ 진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나, 제3국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참여 등의 간접투자 방식은 허용할 것임.

○ 나진·선봉지대의 관광 및 무역중계 기능 확대를 위해 남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화물 수송루트 확대 및 항로 개설과 관련된 협상은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임.

2. 고려사항

-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및 기능이 관광 및 중계무역위주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기업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나진·선봉지역 진출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진·선봉지대의 관광 및 무역중계 거점화 추이를 감안, 제3국 기업과의 공동진출 또는 해외 현지법인 활용 등을 통한 우리기업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지대’의 무역중계 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종합적 육·해상 수송체계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계획 및 구체적 실현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나진·선봉지대의 기능이 분리되어 수출형 제조업 및 위탁가공업 부문이 신의주·원산·남포 등 기타지역에 배치될 경우에 대비, 우리기업의 참여 및 수송로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계획의 마련은 물론, 투자보장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부록>

나진·선봉지대 외국기업 진출현황⁴¹⁾

<중국>

기업명	추진사업 내용	추진현황
연변해운항만공사	나진항 크레인설치(110톤 규모)	한국특수선과 합작, 협력사업자승인
연변용흥무역집단총공사	숙소, 식당, 상점, 택시업, 연유판매업	351만 달러계약, 27만 달러 투자
북경순선무역회사	봉사업(상점, 식당), 중계업	20만 달러 계약, 17만4천 달러 투자
훈춘무역신성회사	상점	50만 달러 계약, 33만 달러 투자
연변국제무역상사유한책임회사	제약업, 약국업	10만 달러 계약, 1만 달러 투자
북방극동북지구전자기계청사	○상점업 ○설비·자재 중계무역업	• 50만 달러 계약, 31만5천 달러 투자 • 30만 달러 계약, 23만 달러 투자
훈춘장애인취업관리소	상점업	21만 달러 계약, 11만5천 달러 투자
임업국제합작공사훈춘공사	목재, 중계수송	260만 달러 계약, 69만 달러 투자
홍대무역공사	고려약 생산, 판매	32만 달러 계약, 27만4천 달러 투자

41) 홍성국, “나진·선봉지대 경제개혁관련 조치와 최근 동향”(1999. 6), 통일부 정보분석실 경제담당관실 자료, pp. 14~16로부터 정리.

기업명	추진사업 내용	추진현황
연변신흥경제무역유한회사	온실채소생산판매, 중계무역	52만 달러 계약, 10만 달러 투자
연변고려축목발전유한회사	청량음료점, 호텔경영	300만 달러 계약, 30만 달러 투자
훈춘용성경제무역회사	식당봉사업, 중계무역	50만 달러 계약, 25만 달러 투자
길림성대외무역공사 연길아세아공사	봉사업	100만 달러 계약, 30만5천 달러 투자
종합수출입공사길림공사	상점, 관광봉사, 중계무역	230만9천 달러 계약, 1만3천 달러 투자

<홍콩>

기업명	추진사업 내용	추진현황
타이슨 기업	○여관, 상점, 식당업 ○택시업, 연유판매봉사업, 화물운송업 ○도로건설, 관리, 자동차수송업, 상점운영	·740만 달러 계약, 730만 달러 투자 ·200만 달러 계약, 74만2천 달러 투자 ·7,220만8천 달러 계약
페레그린투자(주)	북한 대성은행과 합영은행	750만 달러 투자
홍콩라선투자자문유한회사	상품판매, 관광봉사업, 상업센터 건설 및 관리	700만 달러 계약, 50만 달러 투자
엠펜러 그룹	호텔·오락센터 건설	1억 8,000만 달러 계약, 약 2,500만 달러 투자

* 홍콩페레그린투자(주)는 최근 파산했으나, 북한에 대한 투자분의 처리방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미국>

기업명	추진사업 내용	추진현황
스탠튼 그룹	선봉화력발전소, 승리화학 원유공장 가동능력 향상	북한측과 합의
동아시아개발회사	나진호텔건설	500만 달러 투자, 투자확대 협의중
GM	자동차 부품 공장 건설	북한측과 합의
통신분야 관심기업: AT&T, MCI, 칼럼비아 커뮤니케이션		

<일본>

기업명	추진사업 내용	추진현황
미나미 프로젝트	청진↔마이즈루간 컨테이너선 운항	진행중
제이부코산유한회사(조총련계)	택시업, 중개무역업, 운전기재판매업	75만 달러 계약, 31만6천 달러 투자
만경봉종합개발주식회사(조총련계)	관광봉사업(식당, 숙소, 음악, 전자오락)	302만 달러 계약, 252만 달러 투자

<기타>

기업명	추진사업 내용	추진현황
Gold Ring사 중 7개 기업 컨소시엄(러시아)	나진항 부두 개보수, 나진-두만강역 철도사업	진행중
Shell Pacific(영국)	원유저장 및 공급시설 투자	200만 달러 투자 예정
ING은행(네덜란드)	ING 동북아은행 나·선지점 개설	평양지점을 운영해왔으나, '99. 4월 철수 결정
Loxley그룹(태국)	전기통신사업 건설·운영	3,500만 달러 투자

<남한>

*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은 없으며, 단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이 4개사 있음.

기업명	추진사업 내용	예상 투자규모
삼성전자	나진·선봉통신센터	700만 달러
동양시멘트	시멘트 싸이로 건설	300만 달러
동룡해운	크레인, 지게차 등 하역설비 투자	500만 달러
신일피혁	피혁가공 및 의류제조·판매	300만 달러
현재 7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 대기중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운외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채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6,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준홍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6,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0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i>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i>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7 (1998)</i>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북한 나진·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 정책 전망

統一情勢分析 99-05

發行處 統 一 研 究 院
編輯人 統一研究院 北韓經濟社會研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6(代), FAX : 901-2544
印刷處 成林印刷 전화 : 704-8877
印刷日 1999년 7월 일
發行日 1999년 7월 일
